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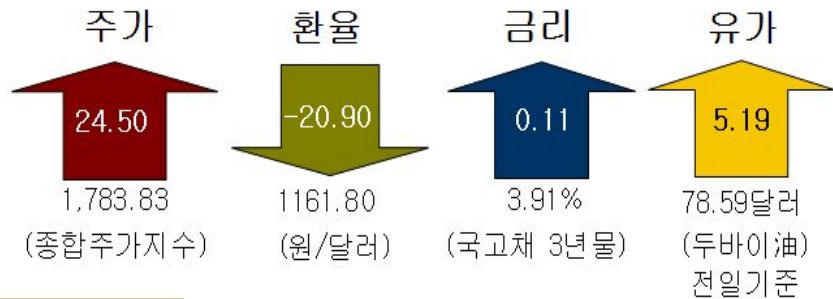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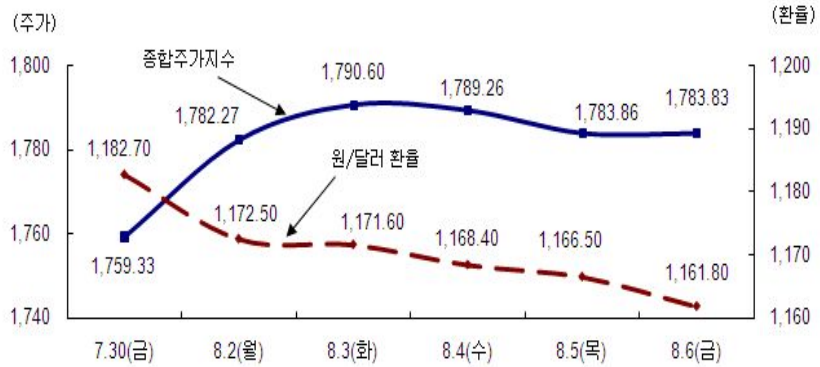
10-29(통권 409호)
2010.8.6



- 이산가족 상봉 시급하다
- 70세 이상 고령층이 77%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30~8.6)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이산가족 상봉 시급하다	
- 70세 이상 고령층이 77%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최 성 근 선임 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 홍 순 직 수석 연구위원 (2072-6221, sjhong@hri.co.kr)

Executive Summary

□ 이산가족 상봉 시급하다

- 70세 이상 고령층이 77%

■ 이산가족 상봉 추이

(의미)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간의 전쟁과 분단으로 헤어진 가족들 간의 만남을 의미한다. 이는 동족간 이산의 한을 풀어주는 한편, 남북 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다.

(추이) 2000년 남북정상선언에서 방문단의 상호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당국 차원의 첫 상봉을 시작하여 점차 활성화 되었다. 지난 10년간 당국 차원에서는 총 1차례에 걸쳐 연평균 2,000명 규모로 상봉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당국과 민간 차원의 상봉이 모두 감소했을 뿐 아니라 특히 당국 차원의 상봉은 2008년 무실적에 이어 2009년 추석맞이 상봉 이후에 중단된 상황이다.

(현황) 1988년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상봉 신청자는 총 12만 8,123 명으로 이중 34.4%인 4만 3,990 명은 사망했고, 65.6%인 8만 4,133명은 생존해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당국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이뤄져 왔는데, 1985~2009년까지 총 5,926건의 24,363명이 상봉의 기회를 가졌다. 이중 당국 차원에서는 총 4,195건의 2만 1,005명이, 민간 차원에서는 총 1,731건의 3,358명이 상봉하였다.

■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시급성

(이산가족의 고령화 급속 진행) 현재 이산가족의 연령 분포의 특성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전체가 5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77.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3년과 비교할 때,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약 14%p 증가하였으며, 특히 80대의 비율이 약 17%p나 증가했다.

(상봉률 수준의 절대 미흡) 이산가족 고령화의 급진행으로 사망률에 비해 상봉률 수준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2004년 이후 사망률은 매년 평균 2.8%인 반면 상봉률은 1.8%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약 3,800명에 달한 반면 상봉자 수는 2,300명에 불과하여, 연간 1,50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특히, 2008년 이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08년에서 현재까지 이산가족 사망률은 8.0%p 증가한 반면, 상봉률은 0.6%p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상봉 기회는 더욱 적어졌다.

(고령자의 생존 기간이 10년 남짓 불과) 현재의 이산가족은 사망률과 평균 기대잔여수명으로 보아 23년 후에 모두 사망할 것으로 보이며,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0년 이내에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생존자들이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매년 상봉 규모를 7,7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매년 6,900명 이상 상봉이 이뤄져야만 이산의 한을 풀 수 있다.

■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방안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상봉 시한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하루속히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로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올 추석에 맞이해서 재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사망률에 비해 상봉률이 낮고 고령화가 급속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봉 인원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셋째, 대면 상봉과 함께 화상 상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 이산가족 상봉 시급하다 : 70세 이상 고령층이 77% >

이산가족 상봉 추이

- (의미)** 남북간 전쟁과 분단으로 헤어진 가족들 간의 만남으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
 - 이는 동족간 이산의 한을 풀어주는 한편, 남북 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
- (추이)** 6.15정상회담에서 방문단 상호교환에 합의한 후, 2000년에 당국 차원의 상봉 시작
 - 2000년 이후 지난 10년간 총 17차례에 걸쳐 연평균 2,000명 규모로 상봉
 - 다만 2008년에 당국 차원의 상봉 무실적에 이어, 2009년 9월 이후에는 전면 중단
- (현황)** 1988년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총 12만 8,123명으로,
 - 이 중 4만 3,990명(34.4%)이 사망하였고, 8만 4,133명(65.6%)이 생존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시급성

- (이산가족의 고령화 급속 진행)** 이산가족의 연령 분포상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77.3%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재개가 시급
 - 2010년 현재 2003년 대비,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14%p 증가했고, 80대는 17%p 증가
- (상봉률 수준의 미흡)** 2004년 이후 이산가족 사망률은 매년 평균 2.8%인 반면, 상봉률은 1.8%에 불과해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이 연 1,500명에 달함
 - 2004년 이후 이산가족 사망자수는 연평균 3,800명인 반면, 상봉자는 2,300명에 불과
 - 특히, 2008년~현재까지 사망률은 8.0%p 증가한 반면, 상봉률은 0.6%p 증가에 그침
- (고령자의 생존 기간이 10년 남짓)** 평균사망률과 기대잔여수명을 고려할 때, 2년 후에는 현재의 이산가족 생존자가 모두 사망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생존자들이 향후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매년 7,700명 이상 상봉해야 함
 -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0년 내에 매년 6,900명 이상의 상봉이 이뤄져야 함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방안

- (개관)** 고령의 이산가족은 상봉 시한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상봉 재개 필요
- ①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추진** : 추석을 맞이하여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
 - 광복 65주년 8.15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포괄적 대북 대화 제안
 - ② **대규모 상봉 추진** : 사망자 수에 비해 상봉자 수가 적고, 고령화가 급속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매년 7,700명 이상의 대규모 상봉을 추진
 - 특히, 현재 추첨 방식의 당국 차원의 상봉을 '고령자 우선' 방식으로 변화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활용, 정치적 현안에 상관없이 상봉의 정례화 제도화 추진
 - ③ **화상 상봉 확대** : 대면 상봉과 함께, 화상 상봉을 적극 활용하여 상봉 기회 확대
 - 현재의 남북 경색 국면과 고령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을 고려하여, 화상 상봉 장소를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
 - ④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의 상시화** : 대면 상봉의 어려움 완화와 빠르고 원활한 대면 상봉 추진을 위해서라도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I.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와 추이

○ (의미)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간의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 간의 만남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도 기여

- 이산가족 상봉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권 및 인도주의적 사안으로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당위적 사안임
- 이산가족 상봉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요 가족권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당국간 대화는 단기적으로는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도 큰 보탬이 됨
-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중단된 당국간 대화 재개의 물꼬를 여는 역할을 할 것임
- 1985년 최초의 남북한 고향방문단 교환이 1988년 7.7 선언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2009년 추석맞이 이산가족 행사가 2차 핵실험 이후의 경색된 남북 간에 대화와 합의를 도출해내었음
-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천안함 사건 이후의 된 남북 경색에도 보탬
-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통합은 물론,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
- 이산가족 상봉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을 넘어 모두가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민족 평화와 화합을 위한 이벤트임

○ (상봉 추이) 2000년 8.15 때 당국 차원의 첫 상봉을 시작으로 점차 활성화 되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모두 감소

- 2000년 이후, 지난 10년간 모두 17차례에 걸친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이뤄졌으며 총 2만 848명의 이산가족이 상봉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되어, 해마다 2~3차례의 상봉 행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숫자는 해마다 꾸준한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08년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2009년 9월에 금강산에서 888명의 상봉 이후 지금까지 중단되었음

<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추이 (2000~20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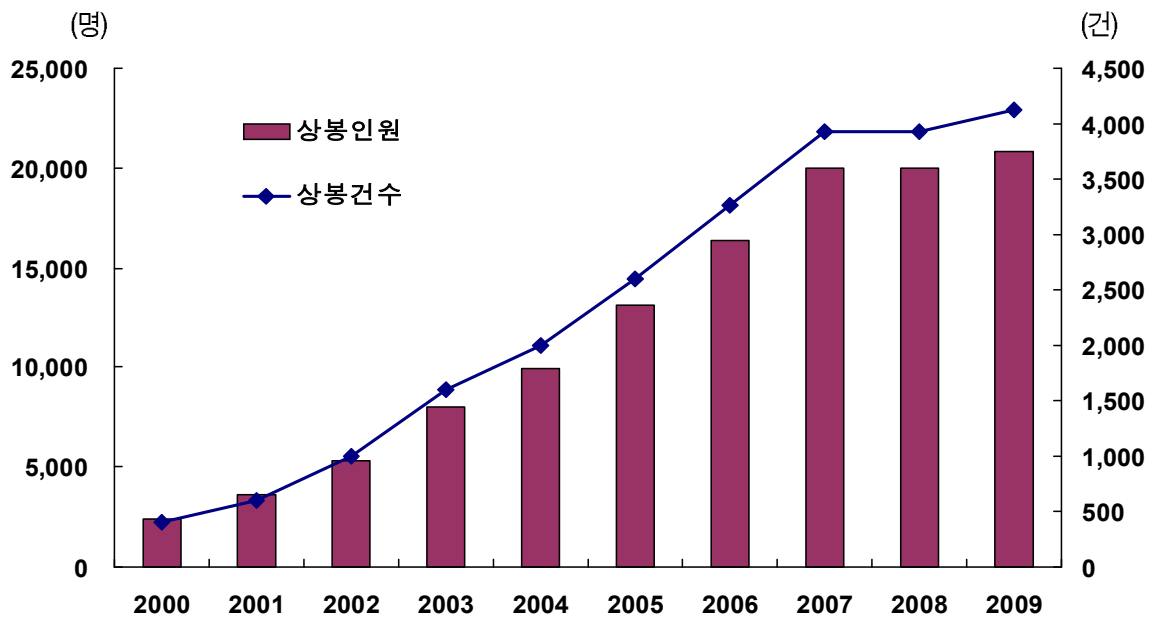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회수	2	1	2	3	2	2	2	2	0	1	17
인원(명)	2,394	1,242	1,724	2,691	1,926	3,134	3,236	3,613	0	888	20,848

자료 : 통일부

주 : 상봉자 수는 화상상봉을 포함한 숫자임

- 2007년까지 상봉한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8년 이후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정체 상태를 나타냄

<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누적 현황 (2000~2009) >



- 민간차원의 상봉은 1990년부터 꾸준히 이뤄져 왔으나,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민간 상봉은 20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 51명의 상봉에 그침

- 특히, 2008년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북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이산가족 상봉도 현저하게 감소함

<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추이 (1990~2009)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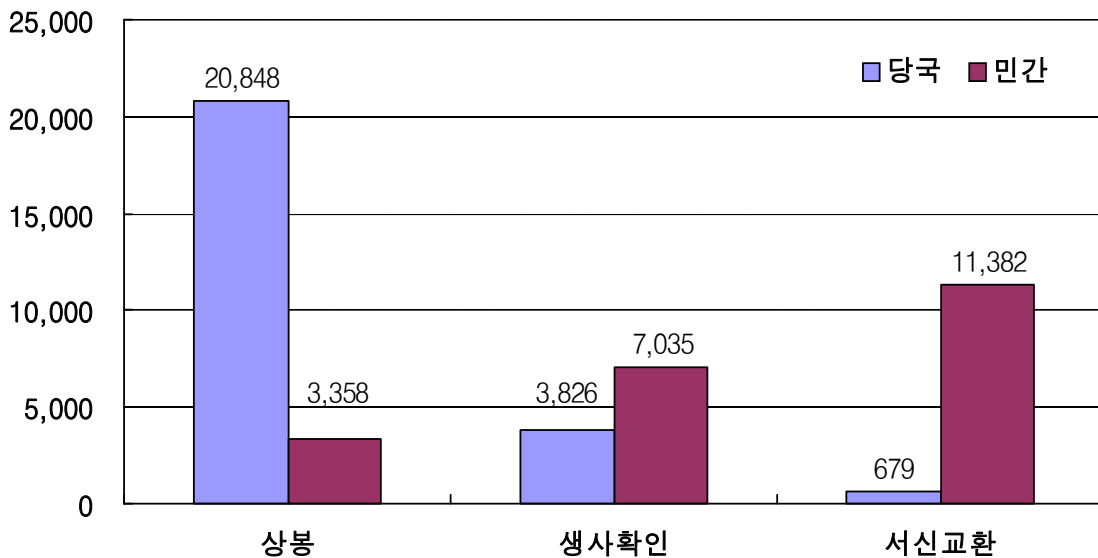
연도	상봉인원	연도	상봉인원	연도	상봉인원	연도	상봉인원
1990	6	1995	17	2000	392	2005	261
1991	11	1996	18	2001	493	2006	105
1992	19	1997	61	2002	616	2007	169
1993	12	1998	110	2003	677	2008	97
1994	11	1999	213	2004	470	2009	51

자료 : 통일부

- 민간 차원에서는 상봉 비용과 제3국이라는 공간적인 제약때문에 생사확인이나 서신 교환의 형태로 주로 이뤄짐
- 당국 차원에서는 직접 상봉의 비중이 높은 반면, 생사 확인이나 서신 교환의 경우 민간 차원의 교류가 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당국과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비교 (2000~2009) >

(단위: 명)



자료 : 통일부

○ (상봉 현황) 이산가족 상봉은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동시에 이뤄져왔으며, 당국 차원의 교류가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 당국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2009년까지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을 합쳐 총 4,195건 성사되었으며, 2만 1,005명이 상봉함
 - 1985년에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실시로 총 65가족, 157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함
 - 2000년 이후, 당국 차원에서 현재까지 대면상봉으로 1만 7,100명이 상봉했고, 화상상봉은 2005년에 시작되어 총 3,748명이 상봉했음
 - 민간차원의 상봉은 1990년부터 시작되어 총 1,731건(3,358명)이 성사되었으며 제3국에서의 상봉(98.0%)이 주로 이뤄졌음
- 당국 차원에서의 상봉 비중이 민간 차원의 상봉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당국 차원의 상봉은 전체 상봉건수 가운데 70.8%를 차지하였으며, 반면 민간 차원의 상봉은 29.2%를 나타냄
 - 이는 민간 차원에서의 상봉이 대부분 소규모로 이뤄지는 데다가, 특히 북한 가족이 제3국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임
 - 특히, 2005년에 정부에 의해 도입된 화상 상봉은 총 3,748명의 이산가족의 상봉 기회를 제공하여, 이산가족 상봉 확대에 크게 기여함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 (1985~2010) >

구분	당국 차원		민간 차원		합계
	방북상봉	방남상봉	방북상봉	3국 상봉	
대면상봉	3,307건 (14,557명)	331건 (2,700명)	35건 (133명)	1,695건 (3,227명)	5,368건 (20,617명)
화상상봉	557건 (3,748명)		-		557건 (3,748명)
합계	4,195건 (21,005명)		1,730건 (3,340명)		5,925건 (24,365명)
비중(%)	70.8%		29.2%		100%

자료 : 통일부

○ (생존자 현황)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상봉 신청자 가운데 65.6%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88년부터 등록을 시작하여 현재까지(2010년 5월 31일)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총 12만 8,123명이며, 이중 4만 3,990명(34.4%)이 사망하였고, 8만 4,133명(65.6%)이 생존
- 부부나 부모 혹은 자녀 관계에 있는 상봉 신청자가 4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제나 자매가 약 39.7%, 3촌 이상은 13.3%를 차지함

< 이산가족 생존자 가족 관계 >

구분	부부/부모/자녀	형제/자매/동생	3촌 이상	계
인원수(명)	39,506	33,360	11,267	84,133
비율(%)	47.0	39.7	13.3	100

자료 : 통일부

- 상봉 신청자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황해도 출신이 23.2%로 가장 많았으며, 평안남도(13.3%), 평안북도(8.1%)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 35.0%를 차지하는 기타 지역 출신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월북 가족인 것으로 추정됨

< 이산가족 생존자 출신지역 비율 >

(단위 : 명, %)

구분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경기	강원	기타	계
인원수	19,533	11,190	6,834	9,746	2,746	3,090	1,485	29,509	84,133
비율	23.2	13.3	8.1	11.6	3.3	3.7	1.8	35.0	100

자료 :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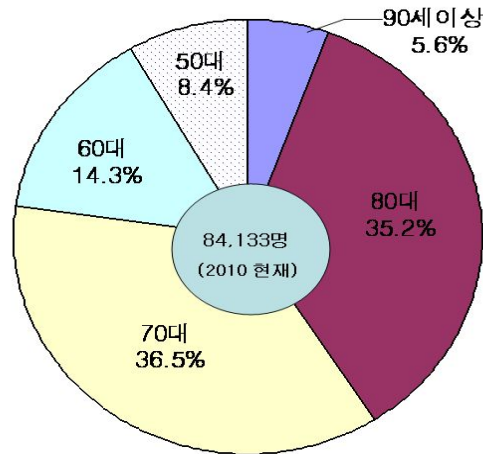
II.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시급성

1. 이산가족의 고령화 급속 진행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연령 분포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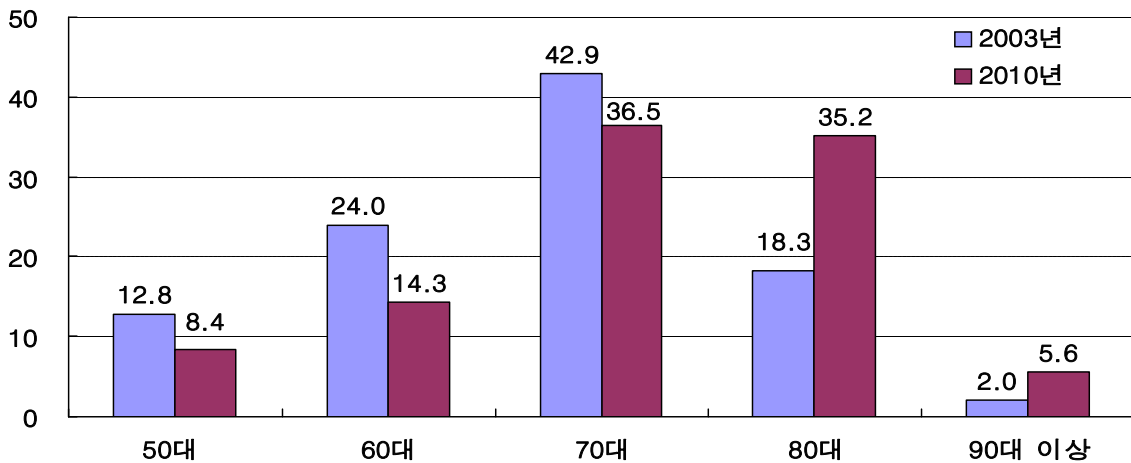
-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 중 전체가 5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77.3%를 차지함
- 연령층별로는 70대 36.5%와 80대 35.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연령별 분포 >



- 2003년과 비교할 때,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약 14%p 증가하였으며, 특히 80대의 비율이 약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고령화 추이 >



2. 상봉률 수준의 절대 미흡

○ 이산가족 사망자가 연간 약 3,800명에 달하며, 사망률과 상봉률 격차로 인해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연 1,500명에 달함

- 이산가족 사망자의 비율은 증가하나, 상봉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매년 1,50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한채 사망하고 있음
 - 2004년~2009년까지 사망률은 평균 2.8%로 사망자수가 연간 약 3,800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누적 사망자 비율은 34.3%에 달함
 - 반면, 이산가족 상봉률은 평균 1.8%로 상봉자는 연간 약 2,300명 수준에 불과하며, 현재까지의 누적 상봉자 비율은 19.0%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이 매년 약 1,500명 발생
- 특히, 2008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정체된 반면, 사망자 비율(누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08년의 경우, 민간차원에서 97명만이 상봉하였고, 2009년에는 추석맞이 당국과 민간 차원의 상봉을 포함해서 총 939명의 상봉이 이뤄짐
 - 2008년~2010년 5월까지 이산가족의 사망자 비율은 8.0%p 증가한 반면, 상봉자 비율은 0.6%p 증가하는 데 그침

< 연도별 이산가족 사망자와 상봉 추이 비교 (2003~2010) >

(단위 : 명, %)

연도	사망자 (누계)	생존자 (누계)	합계	연간 사망자	사망률 (누계)	상봉자		상봉률 (누계)
						연간	누계	
2003년	19,488	103,397	122,885	-	15.9	3,368	10,406	8.5
2004년	23,058	100,861	123,919	3,570	18.6	2,396	12,802	10.3
2005년	26,945	96,268	125,213	3,887	21.5	3,395	16,197	13.1
2006년	28,997	94,933	125,930	2,052	23.0	3,341	19,538	15.8
2007년	33,300	93,487	126,787	4,303	26.3	3,782	23,320	18.4
2008년	38,926	88,417	127,343	5,626	30.6	97	23,417	18.4
2009년	42,123	85,905	128,028	3,197	32.9	939	24,356	19.0
2010년 (~5월)	43,990	84,133	128,123	1,867	34.3	9	24,365	19.0

자료 : 통일부

- 주 : 1) 이산가족의 전체 합계가 변동하는 이유는 미등록자의 등록이 추가로 이뤄지기 때문임
 2) 상봉자수는 당국 차원(화상상봉 포함)과 민간 차원의 상봉자를 합한 수치임

3. 고령자의 생존 기간이 10년 남짓 불과

○ 현재의 이산가족은 사망률과 평균기대여명으로 보아 약 23년이면 모두 사망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2년 내에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전망

- (평균사망률)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이산가족 사망자 수는 연간 약 3,800명으로, 생존자 8만 4,133명은 약 23년이 지나면 모두 사망하게 될 전망
 · 이산가족의 연도별 사망률이 2.8%이고 현재 생존율 65.6%를 감안하면, 향후 23년이 지나면 모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기대여명) 현재 이산가족은 모두 50~60대 이상으로, 이들의 기대잔여수명이 23.8년임을 감안하면, 이산가족 대부분은 23년 이후에 사망 예상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세대별 평균기대여명은 50대가 28.1년, 60대는 19.6년이며, 70대는 12.1년, 80대는 6.6년임
 · 따라서 50~60대의 평균 기대 여명은 약 23.8년이며, 70~80대는 9.4년임

○ 따라서 현재의 모든 생존자들이 향후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매년 상봉 규모를 7,7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10년간 매년 6,900명 이상 상봉해야 함

- 7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77.3%인 점과 70~80대의 평균 기대 여명이 9.4년임을 감안하면, 매년 6,920여 명씩 상봉이 이뤄져야 함
 · (생존자 84,133명 × 고령자 비율 77.3%) / 9.4년 = 6,918.6명

- 한편 50~60대의 경우, 생존자 비율이 22.7%이고 평균 기대 여명이 23.8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생전에 모두 상봉하기 위해서는 매년 802명씩 상봉이 이루어져야 함
 · (생존자 84,133명 × 50~60대 비율 22.7%) / 23.8년 = 802.4명

- 따라서 현재의 상봉 신청자가 모두 생애 한번이라도 이산가족들과 상봉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규모가 최소한 7,720명이 되어야 함
 · 50~60대 상봉자 802.4명 + 70~80대 상봉자 6918.6명 = 7,721명

Ⅲ.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방안

- (개관)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생애 상봉 시한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하루속히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
- (추석맞이 상봉 추진)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올 추석을 맞이해서 재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
 - 9월 22일의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해에도 이뤄졌던 사안이므로 경색 국면 중에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정책임
 -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 특히, 광복 65주년을 맞이하여 8.15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을 포함한 남북 대화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상봉 추진) 사망자에 비해 상봉자수가 적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봉 인원을 최대한 확대해야 함
 - 고령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생존 기간 내에 한번이라도 상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년 상봉 규모를 연간 7,700명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추천 방식의 당국 차원의 상봉을 '고령자 우선' 방식으로 변화를 추진
 - 또한 북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꺼번에 대규모 상봉 추진은 불가능하므로, 상시 상봉에 대한 남북 간 합의와 이의 제도화 마련이 중요
 - 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를 적극 활용하여, 남북 간의 정치적 현안에 상관없이 회담과 상봉의 정례화를 추진

○ (화상 상봉 규모 확대) 대면 상봉과 함께 화상 상봉을 적극 활용하여 이산가족의 상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

- 화상 상봉의 경우, 북한 당국으로서도 대면 상봉보다 행사 준비를 위한 부담이 대폭 감소되므로 합의 도출이 비교적 용이한 방법일 수 있음
- 더욱이,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이 상당수임을 고려할 때, 화상 상봉 장소를 확대하는 정책 필요

○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의 상시화) 직접 상봉의 어려움과 상봉의 장애물들을 고려하여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을 상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

- 경색 국면의 현 남북 관계 고려는 물론, 직접 상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라도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아직까지도 생사 확인조차 못한 이산가족이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의 확대가 절실함
- 기존의 상봉 가족에게도 고령 가족의 사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의 상시화가 필수적임

최성근 선임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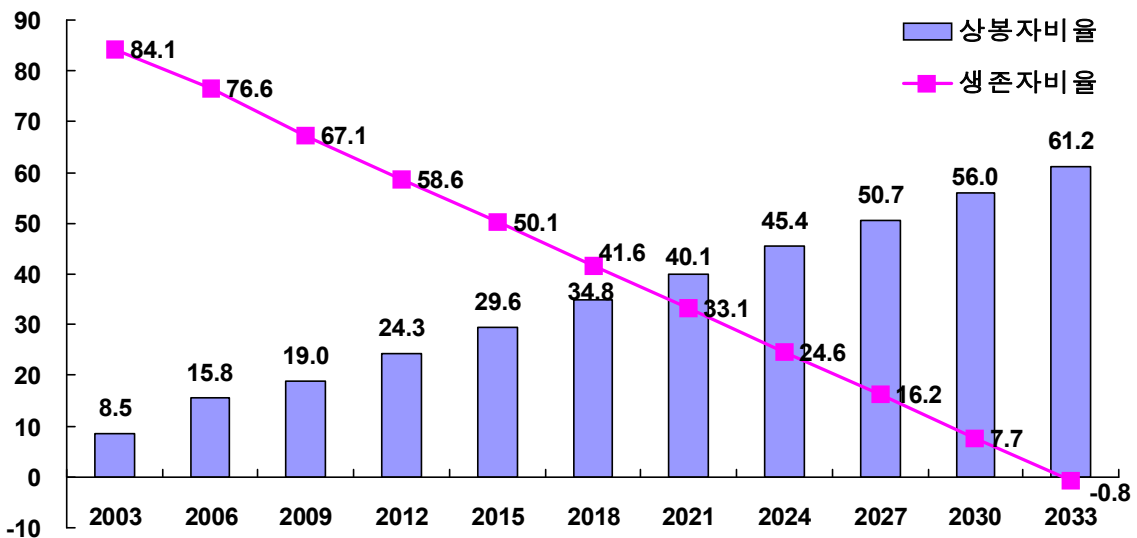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2072-6221, sjhong@hri.co.kr)

< 보론 > 이산가족 생존자 비율 추정

○ 생존율과 상봉률을 기초로 추정된 결과, 2033년에는 현재 생존해있는 이산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절반 정도가 상봉하지 못한 채 사망할 우려

- 2004년 이후 이산가족은 연평균 생존율이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33년경에는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이 모두 사망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연평균 상봉 비율은 약 1.8%p씩 증가하여 이산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2033년경에는 상봉율은 61.2%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현재까지의 상봉 규모를 유지한다고 해도, 약 38.8%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못한 채 사망할 것으로 예상
-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에 생존자 비율은 60% 이하로 하락할 전망
 - 2007년 약 9만 3,500명이던 생존자 수는 2012년에 약 7만 4,000명으로 2만명 가량 감소하고, 생존자의 비율은 약 58.6%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 연평균 사망자가 3,800여명임을 감안할 때, 2009년 상봉 규모(당국 차원)인 888명씩 매년 상봉할 경우에는, 연평균 약 3,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하게 됨

< 이산가족 생존자 비율 추정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미국	0.0	-4.0	-6.8	-2.6	-4.9	-0.7	1.6	5.0	3.3	3.7	2.4
유로 지역	0.6	-0.4	-1.9	-4.1	-2.5	-0.1	0.4	0.0	1.0	0.2	-
일본	-1.2	-4.3	-9.6	-5.2	-15.8	6.9	0.4	4.6	2.4	5.0	-
중국	9.6	9.0	6.8	8.7	6.2	7.9	9.1	10.7	10.5	11.9	10.3
한국	2.3	3.1	-3.4	0.2	-4.3	-2.2	1.0	6.0	5.3	8.1	7.2

주: 1)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7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7월30일	8월6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2.91	2.90	-0.01%p
	엔/달러	90.76	96.65	92.93	86.42	85.84	-0.58¥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3058	1.3181	0.0123\$
	다우존스지수(p)	8,776	8,447	10,428	10,466	10,675	209p
	닛케이지수(p)	8,860	9,958	10,655	9,537	9,654	117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3.80	3.89	0.09%p
	원/달러(원)	1,259.5	1,273.9	1,164.5	1,182.7	1,161.8	-20.9원
	코스피지수(p)	1,124.5	1,390.1	1,682.8	1,759.3	1,783.8	24.5p

주 : 8월 6일 해외지표는 전일(8월 5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7월30일	8월6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78.53	82.19	3.66\$
	Dubai	36.45	71.85	78.06	73.75	78.59	4.84\$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74.35	277.67	3.32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